

“자치구, 국·공유지 관리 허술”

■ 광주시 자체 감사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각 자치구가 행정재산이나 도로, 하천 등 국·공유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직원들은 가족수당 1천여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 국·공유 재산관리=이들 구청은 관내 행정재산인 경로당,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해 무상 사용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차 없이 무상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로 점용료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실태 조사나 변상금 부과 등 적법 처리 절차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 점용료 미납자에 대해 소액이거나 납부 구두약속 등을 이유를 들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市환경공단 가족수당 1천여만원 부정수령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하천에 곡물을 재배한 부당 점용자를 방지, 국공유 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담으로 돼있는 106필지가 실제 저수지나 구거, 도로, 배수장, 궁도장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지목 변경이나 변상금(600만여 원)을 부과하지 않아 시 감사에 적발됐다.

◇환경시설공단=직원 26명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부모사망이나 20세 이상 자녀신고 자연 등으로 가족수당 1천48만원을 부당수령했으며, 관내 출장비도 51건 324만원이 차오로 지급돼 각각 회수 조치됐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조경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1천만원 이상 동일 유사용역을 사업장별로 분리발주하는 방법으로 사업소장이 집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내 첫 쇄빙선 '아라온호' 남극 탐사 돌입

12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첫 쇄빙선 아라온호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리틀턴항에서 남극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위기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전남도는 갑작스런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도민을 돋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구금시설 수용, 이혼,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 등으로 생계 및 의료비, 자녀 학비 등 4인 가구 기준 최대 475만2천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또 한시생계보호사업 종료로 지원이 중단된 지역 주민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각종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 복지사업을 통해 휴폐업·실직자를 포함 9천211명의 도민에게 62억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또 법·제도상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424가구에 대해 5억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30가구에게 1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중위도 지방의 고기압은 원래 극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지만 음의 극진동 시기에는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더 멀리 남하할 수 있게 된다.

獨, 폭설에 곳곳 고립…폴란드에선 80여명 사망

북극해 일대 '따뜻한 겨울'…호주는 때아닌 폭염



한파로 꽁꽁凍結된 미국 플로리다 오렌지.

여전의 운행 지연 및 중단 사태를 빚었다.

또 지난 10일 북동부에 내린 폭설로 도로들이 차단되면서 300여명의 운전자들이 도로에 갇히고 마을들이 고립됐으며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극심한 한파에 지금까지 8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광주 시립노인병원 수탁기관에 '전남대병원' 선정

광주시는 12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건립될 '시립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전남대병원을 선정했다.

전남대병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 기관 2곳 가운데 노인질환의 진료·치료 및 재활사업에서 높은 점

수를 얻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1만5천385㎡ 부지에 130병상 규모로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등 127억원이 투입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포상금 30억 '시민생활안정'에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청년 인턴제 지원 등

광주시가 200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재정 인센티브 30억원 전액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안정사업에 투입한다.

12월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살리기 및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30억원 가운데 20여 억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11억1천500만원)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사업 지원(8억원) 등에 쓰기로 했다. 또 나머지 10억원은 저소득층 식품지원사업인 푸드뱅크·마켓사업(1억원)과 임신부 업체 제공(1억5천만원), 재난구조 특수장비 구입(2억원), 생활권 자투리 공간 꽂나무숲 조성(1억원)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예산에 반영된

범죄취약지역 120곳에 추가로 25곳의 어린이보호시설 모든 구간에 CCTV 110대가 오는 3월 이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등 경제살리기 2대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6대 특별사·광역시 중 2위를 차지,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으며, 국정시책 추진 면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자체 발주분에 대해서는 을 상반기 안에 조기발주하고 시·군 발주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각종 물품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공사 및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나 용역 발주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 자재를 반영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전남도 올 2조원대 공사 조기 발주

지역업체 참여 늘리고 지역 자재 사용 권장

올해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2조원대 공사가 조기 발주되고 지역업체 참여폭도 넓어진다.

전남도는 3천700억원 규모의 자체 공사를 포함해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1조8천억원 등 총 2조1천703억원의 공사 대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기 발주 대상은 건당 1천만원 이상 공사다.

도 자체 발주분은 공사 403건에 3천298억원, 용역 141건 245억원, 물품구매 149건 194억원 등이다.

주요사업은 화원~삼포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비 310억원을 포함한 도로 공사비 150건 1천859억원, 수해상

